

目 次

- 文民政府 國政改革의 主要內容 1
- 最近 金融·外換市場 動向 및 評價 7
- 安保關聯 懸案 ^{대응} 12
- 4者會談 推進 19
- 對北食糧 支援 23
- 北韓離脫住民 管理 27
- 對北輕水爐 支援事業 30
- 南北交流協力 現況 37

文民政府 國政改革의 主要內容

- ◇ 지난 4년반동안 문민정부는 개혁방향을 우리 사회의 「합리화·정상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한 「세계화·정보화」와 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혁파」에 두고 강도높고 지속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하여 왔음.
- ◇ 문민정부는 이러한 개혁작업을 민간의 폭넓은 참여속에 실천하기 위해 민간주도 또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환용함으로써 통상적인 정부조직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개혁과제를 공론화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좋은 선례를 남겼음.

□ 權威主義 殘滓清算 및 責任行政의 具現

- o '안가' 철거등 청와대 스스로 권위주의를 벗어던지며 안기부의 정치관여를 금지시키고 군내 사조직을 제거하고 군통수권을 확립하는 등 구권력기관의 재자리 찾기 완수

- 대통령의 자발적인 재산공개이후, 과거정부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단행하는 등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계기 마련
-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지방화시대를 열고 민주정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쇄신작업을 추진
 - 국민 및 일선행정기관 등의 제안을 받아 전·출입 신고 절차 간소화, 녹색운전면허증 등 2,400여건의 쇄신방안 확정 시행

□ 國家競爭力 強化와 經濟正義 實現

-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여 경제정의의 기반을 확립
- 개방화와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벤처기업 육성,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등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연내시행을 목표로 추진
- 농어촌의 회생과 「돌아오는 농어촌건설」을 위해 98년을 목표로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 획기적 농정대책 시행
 - 농어촌에 대한 연간 투융자규모가 92년 2조8천억원에서 96년 7조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
- 21세기를 향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새로운 노동관계법 제정·공포

□ '삶의 質' 向上을 위한 生活改革 推進

-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98년 목표로 교육재정의 GNP 5% 확보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기반 마련
- 국민들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 수를 확대하고 전관예우등 법조제도와의 관행을 개선하는 등 사업개혁을 추진

· 사법시험 합격자(명)	'95 308	'96 502	'97 600	2000년 1,000-2,000
---------------	------------	------------	------------	----------------------

- 환경모범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였으며 「21세기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수질·대기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대책을 시행하였으며 응급의료제도의 효율화, 의료보장제도 개선 등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중에 있음.

< '92년과 '97년의 주요 사회복지 비교 >

분 야	'92	'97	비 고
의료보험 급여기간	180일	270일	*장애인·노인에 대한 급여기간 제한폐지('96)
노령수당	1만원	3만5천원 ~ 5만원	*'98.7월부터 경로연금 실시
노인복지 시 설	119개소	171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92. 0개소 →'97. 16개소)
장애인생계보장 수 당(대상자)	2만원 (1만2천명)	4만5천원 (4만5천명)	*전화요금 할인등 장애인의 경 제적 부담경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수준 (최저생계비 대비)	58%	90%	*자활지원센터 ('92. 0개소→'97. 10개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중학교· 산업고	중·고교생 전체	*자활지원센터 ('92. 0개소→'97. 10개소)
보육시설 (대상아동)	4,513개소 (123천명)	13,315개소 (457천명)	*'97년은 목표치

0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여성채용목표제 실시등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위향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사관학교의 「금녀의 벽」도 허물고 있음.

· 공무원시험 여성채용목표(%) $\frac{'96}{10} \quad \frac{'98}{15} \quad \frac{2000}{20}$

· 사관학교 여생도모집(%) $\frac{\text{공사('97)}}{20} \quad \frac{\text{육사('98)}}{25} \quad \frac{\text{해사('99)}}{20\sim 25}$

0 국민이 손쉽게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기반시설을 확충

□ 21世紀 未來社會에 對備한 世界化, 情報化의 推進

- 21세기 일류국가건설을 위해 「세계화」를 국가발전의 목표와 전략으로 제시하고 국정 각분야에 걸쳐 49개의 근본적인 개혁과제를 확정·추진
-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등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기반을 구축
 - 미래정보사회의 신경체계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1단계인 97년까지 전국 80개 도시를 연결하는 광케이블망을 완성
 -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확립을 통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사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92년 4.4%에서 97년 16.3%로 전망되는 등 최근의 국가경제성장을 주도
 - 정보화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96~97년간 39만대의 컴퓨터를 각 학교에 보급하여 1학교 1컴퓨터교실을 설치하고 2,800여개교를 인터넷에 연결

最近 金融 · 外換市場 動向 및 評價

□ 金融市場 現況

- 금년들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대기업의 잇단 부도 또는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인하여 이들 기업에 대출해준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여건이 어려워진 바 있음.
- 그럼에도 성장 · 물가 · 대외지급능력등 우리경제의 기본여건이 건실하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시장실세금리는 지난 3~4월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환율도 900~905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음부도율도 금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다만 주식시장이 기아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대기업의 신용위기 확산과 동남아 증시폭락 등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金融市場 安定對策 樹立背景

- 금융시스템은 경제의 혈맥과 같은 존재이므로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임.
- 지난 8.25 발표된 「금융시장안정과 대외신인도제고 대책」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임.

□ 金融市場 安定對策 內容

-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확고한 의지 표명
-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 국책은행의 해외차입확대 등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국내 금융기관에 외화자금 지원
- 부실규모가 크고 대외신인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정상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지원
 -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행의 증자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출자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킴.
-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3조5천억원 조성하여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국고 일시여유자금을 예치(5천억원규모)

□ 金融・外換市場 評價

- 일부에서는 현재의 우리 금융시장상황을 94년의 멕시코나 최근의 태국 외환위기 상황과 비교하여 외환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기초경제여건, 경상수지적자규모, 환율운동, 외환수급구조 등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음.
 - IMF등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을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멕시코나 태국은 외환위기 당시 8% 수준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금년중 3%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국가와 큰 차이가 있음.
 - 멕시코·태국 등은 계속된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국통화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초래한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여건과 외환수급상황에 따라 환율이 유연하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적음.

- 멕시코·태국 등은 채권 및 주식시장을 급격하게 개방함에 따라 단기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었으며 이들 자금이 외환·금융시장을 교란시켰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이 실물경제 활동 연계부문, 장기자본시장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규모가 적어 이들 자금이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희박함.
 -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인 총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작년말 현재 21.6%로 개도국 전체 평균 37.7%나 세계은행의 저채무국가 기준 48%를 크게 밑돌고 있는 반면에, 멕시코는 이 비율이 지난 94년 37.8%에 달했으며 태국은 지난해 49%에 이르렀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재반경제여건이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IMF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도 같은 의견인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安 保 關 聯 懸 案

- ◇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긴급한 상황 및 국제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2~3년이 중요한 시기임.
 - ◇ 최근 북한은 경제파탄·식량기근 등으로 주민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김정일 중심의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갈등 증폭 및 군부 강압통치 등으로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임.
 - ◇ 특히, 황장엽·장승길대사 망명에서 보듯이 권력핵심 계층의 이탈현상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진전되고 있음.
- 황장엽은 우리에게 북한의 전쟁준비 실상을 경고하고 우리 내부에 친북인사가 깊숙히 박혀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한 바 있음.
-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공·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등 빈틈없는 "총력안보" 태세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 「오익제」 越北事件은 安保次元에서 接近해야

○ 사건의 진상은

- 북한이 위장 종교단체인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를 앞세워 '93.10월 북경에서 당시 천도교 교령이던 오익제를 접촉, 오익제의 재북가족(처와 딸)을 미끼로 은밀히 포섭한 후
- 최근까지 오익제를 통해 종교계 등 사회지도층 대상 통일전선공작을 추진해 오다, 김정일 정권이 위기에 봉착하자 오익제를 체제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월북시킨 치밀히 계획된 북한의 공작사건임.

○ 평양의 「오익제」는 무엇을 하고 있나

- 8.15 평양도착후 김일성 동상·혁명열사능·금수산 기념궁전 등을 참배하고 “김일성이 현세의 한운님이다”, “김부자의 인덕정치로 북한은 지상낙원이 되었다” 고 언동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체제선전에 앞장서고 있음.
- 이는 북한의 사주를 받는 친북세력이 각계각층에 암약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일로 동독후 동독첩보기관 「슈타시」의 첩보망이 서독 지도층에서 확인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음.

○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는 시각이 있는데

- 이번 사건은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정치권의 이해와 연관되어 왜곡·변질되고 있음.
- 당국이 정치공작차원에서 입북시켰다거나 입북을 알고서도 방치하였다는 식의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안보기관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
-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문제는 정쟁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됨. 여야를 떠나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가 요청되고 있음.

○ 당국의 관찰대상이었다는데 왜 월북을 막지 못했나

-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당국의 대공방첩활동을 인권문제 등과 연계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만연하여 왔음.
- 명백히 혐의가 드러난 간첩사건조차 용공조작으로 매도당하는 등으로 대공활동여건이 악화된 것도 사건을 미연에 막지 못한 원인이라 하겠음.
- 또한 현실적으로도 '90.8월 이후 북한주민접촉·방북승인자는 1만7,000명으로 이를 모두 추적·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황장엽」씨의 證言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 황장엽 증언의 중심메세지는 무엇인가

- 전쟁위험에 대한 「황」씨의 증언은 북한을 지탱해 온 주체사상의 대부이자 최고위층 인사의 한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무게와 의미를 담고 있음. 그러나 망명 6개월여가 경과한 현시점에서 그의 전쟁위험 경고는 어느새 망각되어지고 있음.
- 황장엽 증언의 중심메세지는 김정일에 의한 남북간의 전쟁은 불가피하므로 우리가 전쟁을 각오하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남북이 공멸하여 민족과 역사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임.
- 4자회담에만 응하면 한·미 양측이 대대적 식량지원과 경협을 제공하겠다는데도 북한은 피폐한 경제상황아래서도 차일피일 핑계와 트집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감추어진 전쟁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음.
- 임진왜란·병자호란, 가깝게 6.25는 전쟁에 대한 경고를 등한시함으로써 자초한 결과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 안보없이 우리의 미래도 생명도 보장할 수 없음.

○ 소위 「황장엽」 리스트의 정치적 활용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 항간에는 소위 「황장엽 리스트」 등을 거론하면서 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리스트」 같은 것이 별도로 제시된 것이 없으며 우리 언론이 만든 조어에 불과함.
- 다만 「황」씨가 오랜세월동안 북한 고위층 지위에 있으면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공수사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적중이며, 안보와 관련되는 사안을 정치에 활용할 생각조차 갖고있지 않음.

○ 황장엽씨의 사상전향 논란에 대하여

- 황장엽씨는 재북시에도 주체사상의 이론적 오류와 현실적 한계성을 인식하고 보다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을 품어오다 망명의 길을 선택하였고
- 그간 수차에 걸쳐 주체사상을 통해 김부자 보위에 앞장서 온데 대해 깊은 자책감을 표출한 바 있어 사상전환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함.

□ 北韓의 最近 戰爭準備 實態는 어떠한가

○ 우리의 1.5배 정규군 보유

- 북한은 우리에게 비해 병력 1.5배(105만명), 주요장비 2-3배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
- 전 군사력의 65%이상을 평원선 이남에 전진 배치시켜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없이도 현위치에서 기습적인 선제공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 특히 지난 '95.10월 MIG-17기 및 IL-28폭격기 등 항공기 110여대를 전방에 전진배치하여 서울까지의 공격시간을 종전 8분에서 6분으로 단축하고 있음.

○ 기습남침 공격능력 지속 보강

- 사단장급 이상 군 고위직의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규모 장성진급(129명), 군부대 방문(11회) 및 창군 65주 열병식 진행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 시킴으로써 군의 충성을 유도
-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전방에 추가배치(총560여문)하고 SCUD 미사일 기지 증설 및 전국규모의 군·민 합동 「진시전환훈련」(3.20~30)을 실시하는 등 전비태세 확충

○ 민생외면, 전쟁물자 비축

- 현재 양곡·유류 등 주요 전쟁물자는 외부 지원없이 3~4개월간 전쟁수행이 가능한 양을 비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축시설을 산간오지에 지하화하여 전시 생존성을 극대화

○ 대남 적개심 고취로 전쟁열기 주입

- “전쟁시는 미제와 남조선을 싸쓸어 버림으로써 총대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달성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등 대남무력 통일과 승전의식을 고취('97.4월 군창건 열병식)

○ 주요 정치일정을 남침의 호기로 간주

- 「대선이 있는 97년이 남조선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가 될 것이며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 식량난 등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상황이 도래할 경우 현 능력과 태세, 김정일의 예측불가능한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판사판식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4者會談 推進

□ 4者會談 提議背景

- 우리 정부는 그동안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토대 위에서 남북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그러나, 북한측은 '93. 4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 대표단의 강제 축출을 비롯, 정전체제를 와해시키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의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 요구
 -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조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차단하고 한반도에서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 대두
-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한과 정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96. 4.16 한미 공동으로 4자회담을 제의

□ 4者會談 推進經過 및 協議內容

- '97. 3. 5 뉴욕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한 가운데 「4자회담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여 4자회담 제의 배경 및 취지 대북설명
- '97. 4.16~21 「공동설명회 후속협약」에서 북한측은 4자회담의 「원칙적 수락」 입장 표명
- '97. 8. 5~7 「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을 뉴욕에서 개최하여 본회담 의제와 절차문제 협의
 - 본회담 개최시기, 장소, 대표수준, 운영방식 등 절차문제에 합의하였으나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입장차이로 미합의
 -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문제」를 양대 의제로 제시
 - 북한측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체제 수립문제」를 기본의제로 하되, 「남한과 주변지역 미군철수문제」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세부의제로 설정 주장

□ 評價 및 展望

- 4자회담 제의('96. 4.16) 이후 우리측의 꾸준한 노력으로 관련 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다는데 의의
- 북한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논의하려는 진지한 자세보다는 4자회담을 지렛대로 하여 미·북 관계개선과 식량지원을 확보하려는 태도 노정
- 그러나,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에 대해 미·중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본회담 개최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북한도 식량난 해결과 대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4자회담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 4자회담 개최를 무작정 지연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

□ 4者會談에 대한 政府立場

- 한반도에서 안정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4자회담을 추진
-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협의·해결하고 미국·중국은 이를 지원·보장
- 4자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함께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도 광범위하게 협의
 - 대북식량지원 및 경협문제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 차원에서 논의 용의
- 정부는 4자회담을 장기적 구도하에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기존입장 견지
 - 미·중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본회담 성사에 주력

對北食糧 支援

□ 北韓食糧問題의 本質

- 북한은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매년 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
 - 집단농장제도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비료·농약 부족, 수송체계 미비 등이 주원인
 - 지난 2년간 계속된 수해는 식량사정을 악화시킨 것이지 근본원인은 아님.
- 따라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농업부문의 개혁 등 식량 부족사태를 가져온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의 자발적인 해결노력이 필요
-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금수산기념궁전」 건설 등 군사력 증강과 정치선전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
 - GNP('95년 223억불)의 25%에 달하는 군사비 56억불의 5~10%만 줄여도 식량문제 해결 가능

□ 우리의 對北支援 努力

- 우리는 북한당국의 적대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정부차원에서는 '95년 2억3천2백만불 상당의 쌀 15만톤 지원과 UN기구를 통한 '96년 300만불에 이어, '97년에도 1,600만불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고, 추가로 1,000만불 상당의 아동용 식품·의약품·영농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
 - 민간차원에서도 한적을 창구로 남북적십자간 직접 전달과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1,646만불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북한주민들에게 전달
- '97년도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북한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
 -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준비해 온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모색하고
 - 북한이 국제기구 등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북한 스스로의 변화도 적극 유도

□ 바람직한 對北支援 方向

- 북한에 대한 지원은 △ 북한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고, △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대북지원과 관련,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견지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한적을 통해서 질서있게 추진해 나가며
 - 정부차원의 지원은 북한의 4자회담 등 제대로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차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 국제적차원에서도 UN회원국의 일원으로서 UN기구의 대북지원에 대해 우리의 경제력 등에 상응한 규모로 참여
-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지원물품을 군용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농업부문 개혁과 군사비 감축 등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취하도록 촉구

□ 民間次元의 對北支援 方向

- 북한이 여전히 우리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일정한 창구를 통해 질서있게 추진할 필요
-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한적을 통해 하도록 한 것은 현재 민간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북전달 방법중 한적이 실효성면에서 가장 적절하기 때문
 - 남북적십자간 합의(5.26, 7.25)를 통해 구호물품의 남북 직접전달과 함께 분배지역 확대, 지정기탁과 기증자 표기, 분배결과 확인 등 그동안 민간단체가 희망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
 - 한적 인도요원들이 북한의 신의주·만포·남양·남포·흥남에 가서 직접 인도·인수하고, 우리측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그대로 보냄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는 쌍방 적십자사를 통해 협의·해결하는 것이 남북간의 관례이자 합의사항
 - '84년 북한의 수재물자 인도·인수시 쌍방 적십자사를 통해 실시
 - 남북기본합의서(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3장제18조)는 「상대측에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그 실천문제는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고 규정

北韓離脫住民 管理

□ 北韓離脫住民 現況

○ 北韓의 경제사정 악화로 북한주민의 이탈현상 가속화

- 중·러 등 인접국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은 약 1,500명으로 추산

- 이중 국내입국 희망자는 500여명 정도

○ 국내입국자도 94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 매년 50명 내외 입국

- 94년 52명, 95년 40명, 96년 51명, 97년 현재 60명

- 49년 이후 국내입국자 총원 : 840명, 현재원 : 659명

□ 北韓離脫住民에 대한 政府의 對策

○ 북한이탈주민을 전원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체류국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등 국제기구와의 다각적인 외교노력 강화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대책 및 해당국가별 사정에 부합하는 국내송환 방안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 제정, 시행(97.7.14)

- 일시적인 물질적 지원보다 실질적인 사회적응능력 제고에 중점

-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실시, 학력·자격인정 등을 통해 자립·적응능력 제고

○ 「정착지원시설」 건립추진

- 기능 :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는 정착지원센터

- 97년 11월 공사착공, 99년 5월 완공목표

- 100명 수용 규모(향후 500명 규모 증축 예정)

○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참여 제도화

- 사회·종교·언론·경제계의 지도급 인사 참여
- 후원회의 역할 : 심리상담, 생활지원, 직업지도, 취업 및 재취업지원, 한가족결연 등

□ ‘北韓離脫支援法’ 施行 以後 社會適應教育 內容

○ 사회적응교육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조기적응에 목표를 두고 있음.

○ 교육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로 설정, 이를 3단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 1단계 : 심리적 안정 및 기본적 남한사회 이해
교육단계(4주)
- 2단계 : 생활안내 교육단계(5주)
- 3단계 : 직업교육훈련 준비 교육단계(4주)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교과목과 연계된 현장 견학 및 체험 교육을 병행 실시

對北輕水爐 支援事業

□ 推進背景

- '93년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탈퇴로 대두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
-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94년 8·15 경축사를 통해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 입장을 천명
- 이러한 우리 정부의 결정이 '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로 이어져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

< 제네바합의 주요내용 >

- 북한은 흑연감속로와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사용후 연료봉의 봉인 및 제3국 이전
-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1,000MWe 경수로 2기 지원과 함께 대체에너지(중유 연간 50만톤) 제공 조치를 주선
- 북한의 비핵화 의무 이행 및 남북대화 착수
- 연락사무소 개설 등 미·북 관계 개선

□ 推進現況

○ 사업 추진체계 구축

- 경수로기획단 설치('95.1)
- 한·미·일 3국 주도하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설립('95.3)
- 한국전력에 대한 주계약자 지정('96.3) 등

○ KEDO·북한간 협상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95.12)
- 공급협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정서 협상 추진('96.4~)
 -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통행」 「통신」 등 6개 의정서 채택
 - 특히, 영사보호 의정서 발효('96.7)로 북한지역에 상주하는 우리측 근로자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
-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절차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KEDO·북한간 실무협상 개최('97.4~'97.7)

- 통신 · 우편 · 항공 · 통관 · 의료 등 19개 분야 합의서 채택

○ 부지조사 및 부지 인수

- '95.8부터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대한 7차례의 부지조사 실시
 - 한전 등 국내 기술진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주도로 조사
- 7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부지로서의 적합성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은 부지 인도증 발급('97.7)

○ 부지준비공사 추진

- '97.7.2 19개 분야에 대한 합의서 채택으로 착공에 필요한 실무준비 추진
 - KEDO금호사무소 개설(7.28)
 - 초기 부지정지 공사에 필요한 인력(90명) 및 장비(중장비 50대 등 15,000톤규모) 투입
 - 경수로 사업 부지와 남한간 통신 · 우편 개통 등 △통신망은 일본을 경유 전용회선 8회선으로 구성 △우편은 북경을 경유한 개남방식으로 운영하되 주소는 한글로 표기

- 이러한 실무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8.19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사업 부지에서 경수로착공식 개최
 - KEDO측에서는 한·미·일을 비롯한 KEDO회원국 대표, 언론취재단, 한진·시공사 대표, 우리측 건설인력 등 약 200명 참석
 - * 우리측에서는 경수로기획단장을 비롯한 정부대표 11명 등 150여명 참석
 - 북측에서는 원자력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기자단 등 80여명이 참석, 착공식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
 - * 북측대표는 공식발언을 통해 미국 또는 KEDO가 경수로제공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측 참여기업의 노력을 평가. 특히 비공식 대화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중심역할과 남북간 직접 대화·집중의 불가피성을 솔직히 인정

- 금번 부지정지 공사는 부지정지, 사무실·숙소·식당신축 등을 포함하는 약 4,500만불 규모의 공사로 12개월에 걸쳐 진행
 - 향후 재정분담협상 타결시 초기 부지정지 공사는 본공사로 연결 전망

□ 向後 推進黨望

○ 재정분담 협상

- 현재 한·미·일 집행이사국간 협의가 진행중인 개략사업비(ROM)의 규모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한·미·일 3국은 재정분담 협상을 개시
- 한국의 중심적 역할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부담이 불가피
 -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탕위에서 적정수준 부담 대책을 강구

○ 후속 의정서 협상

- KEDO·북한간 협상을 통해 품질보장·훈련·인도일정 등 6~7개의 후속의정서 체결 필요
- 북한변화 유도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서 협상 추진

□ 輕水爐事業이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 한반도 안정 및 동북아 평화 유지

- 북한 핵동결 유지를 통한 한반도 안정에 기여
- 미·일 등 KEDO회원국간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대북 공동대응 효과 기대

○ 남북 관계 개선

- 경수로사업 참여인력의 이동에 필요한 해로·항공로 등 남북간 통행로 구축
 - 사업 본격 개시 시점부터는 남북 직항로 개설
- 경수로 사업부지와 남한간 통신·우편 교류 실시
 - 착공 2년 경과시점부터는 무궁화위성을 통한 독자통신망 구축 합의
- KEDO·북한간 채택된 의정서 및 분야별 합의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시 선례로 활용
 - 경수로사업은 전반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

- 장기간에 걸친 남북 주민간 교류·접촉으로 남북간 신뢰 회복에 기여

○ 북한변화 유도

-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경수로 공사 착공은 남북 근로자간의 직접 접촉으로 북한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첫 장 마련을 의미
 - 향후 7~8년에 걸쳐 수천명의 남북 근로자가 원전 건설사업에 함께 종사
- KEDO·북한간의 각종협상은 북한대표들의 인식변화를 통한 북한사회의 국제화·세계화로의 학습효과 기대

南北交流協力 現況

□ 推進現況

○ 남북교류협력은 작년 9월의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크게 위축되어 오다, 북한의 사과조치로 금년들어 신중히 재개

○ 분야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 북한주민접촉은 8월말 현재 970건 1,911명이 승인되어 301건 601명이 성사되었으며, 경제분야와 이산가족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제3국을 통한 남북학술공동행사 등도 일부 성사

* '96실적 : 승인 692건 2,029명, 성사 465건 1,003명

- 남북왕래에서는 금년들어 8월말까지 기업인(42명), 경수로 관련인원(403명), 식량인도요원(104명) 등 50건 554명의 방북이 성사되어, 지난해 28건 146명에 비해 증가 추세

- 남북교역은 7월말 동관기준으로 1억8천2백만불 규모에 이르고 있어, 전년(1억4천3백만불) 동기대비 26.5% 증가

- 또한 대북투자과 관련하여 대창(금강산생수개발사업) 등 3개기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과 LG전자, 미흥식품 등 10개기업에 협력사업자 승인을 통해 경험확대 조치가 이루어졌음.

* 남북경협활성화조치('94.11) 이후 협력사업 승인 : 총 4건, 협력사업자 승인 : 총 21건

□ 向後對策

-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견인차로서
 - 북한의 태도와 남북관계 상황을 주시하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
- 이러한 기조하에 금년들어 정부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기업인 방북, 협력사업(자)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 노력
-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